



순천시, 국내 최초 3대습지 생태축 완성 통해 미래도시 표준 만든다

람사르습지도시 순천, 생물다양성·생태 관광지로 '우뚝'

순천시가 국내 최초 3대 습지 생태축 완성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생태계보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도시의 표준으로 우뚝 서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습지보전법에 따라 순천 와룡 산지습지(와룡동 산277번지)가 국가 내륙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순천시는 기존 순천만 연안 습지와 동천하구 하천 습지에 산지 습지가 추가되면서 국내 첫 3대 습지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해발 고도 500m에 자리 잡은 산지형 저층습원인 '와룡 산지 습지'는 국가 내륙습지보호 지역으로는 30번째다.

면적은 0.9km로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으로 습지 원형으로 복원된 사례라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

지난 2017년 조사 결과 자주땅귀개, 꼬마잠자리, 팔색조, 새매, 담비, 삿,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종을 포함해 총 593종의 생물종이 서식 중이기도 하다.

특히 통발과 한해 또는 여러해살이풀인 자주땅귀개는 당시 전라남도 내륙에서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꼬마잠자리의 경우 성충과 유충이 모두 확인되는 등 습지가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산지 습지-하천 습지-연안 습지'로 이어지는 내륙과 연안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 축이 완성됐으며, 이후 보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와룡 산지 습지 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와룡 산지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육지화가 진행돼 훼손되고 있는 지역을 복원하고 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충 지역에 생태체험장, 최소한의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순천시의 습지보호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동천의 골짜기취로 위기에 직면한 순천만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 반대 운동이 극심했다. 이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 등 각계의 노력에 따라 당시 관철됐던 79마리의 흑두루미가 최근 1만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순천만 습지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생태계 보고가 됐다.

2003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으로 습지 관리가 이뤄졌으며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282개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먹이 제공 등이 해마다 이뤄졌다.

도시와 순천만 습지 사이에 생태계 완충 벨트인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등 노력이 뒤따랐

다. 이 과정을 거쳐 2006년 순천만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2015년 동천 하구가 내륙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서 순천만은 단일지역으로는 국내 최대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됐다. 순천만 연안 습지와 동천하구 습지를 품은 순천이 생태관광지로 떠오르고 관광객도 급증했다. 순천은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시 속으로 정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오천그린광장에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가 찾아오는 등 도시 전체가 인간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기후변화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지속가능한발전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함께 생태계보호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일류 순천은 미래도시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는 사람 또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방증이다"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생태도시이며 순천의 먹거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귀향청년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최대 2500만원 정착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고흥 만들기에 앞장

고흥군이 오는 2월 17일까지 귀향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귀향청년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5년 이상 거주했던 자로 타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재전입한지 3년 이내인 만 19세 이상 49세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사업으로는 IT, 농업, 서비스업 등의 창업자금을 최대 1000만원(청년부부의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과 최대 1000만원까지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이 있다.

군은 세대 당 최대 25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는 물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해 고령화의 주요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귀향청년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청년들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채본부



(사)여수시관광협의회·여수공항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체결

항공연계 관광 활성화...관광 상품 공동 개발, 관광객 유치 합동 마케팅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수시관광협의회(공동회장 정기명, 이순미)와 여수공항(사장 윤형중)은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항공연계 관광 활성화에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항공교통 연계 관광상품 공동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 합동 마케팅 추진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기관의 관광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발굴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정재호 수산관광공장은 "최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군, 고향사랑기부 100명 돌파 '고향사랑' 통 큰 기부

보성군은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19일 만에 100번째 기부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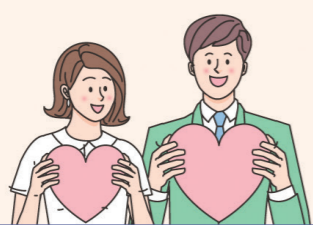
보성군 1호·2호 기부자는 연간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 속에서 100번째 기부자가 나타났다. 고액 기부에 동참하는 출향 향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과 농협 영점업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성=김택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